민주 당권주자, 노선 대결구도 윤곽

丁 '진정한 진보' 鄭 '대담한 진보' 孫 '새로운 진보'

진보 정체성 논쟁 가속화… 이념적 스펙트럼 관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이념적 스펙트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마다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며 진보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범람과 국내 보수정권의 탄생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피폐해졌다는 진보진영의 각종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진보에 대한 정체성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권주자 간 이념적 스펙트럼 분석에 불을 지핀 것은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였다. 손 전 대표는 15일 현실정치 복귀와 함께 '실사구시'와 '국민생활우선정치'를 당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일단 '진보'를 기치로 내세운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의원 등과는 다른 화두를 던진 것이다. 물론 손 전 대표의 지향점이 진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진보'를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자신이 제시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 것이다. 그는 진보의 새로운 모습으로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의 우선과제"라며 '국민생활우선정치'를 제시했다. 나아가 "진보다 뭐다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며 사실상 '좌파'를 정조준했다.

반면 천정배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며 '정의로운 복지국가론'를 내세우고 있으며 정동영 상임고문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담대한 진보"를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 측도 "보수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며 슬로건으로 '진정한 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모두 현 민주당의 스탠스보다는 왼쪽으로 반보 정도 이동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박주선 의원은 당 노선을 '중도·혁신'으로 설정하면서 이를 '따뜻한 진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권 후보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효석 의원은 이념논쟁보다 당운영 현대화, 정책 정당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뉴민주당 플랜'을 당의 정체성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두 주자가 '생활정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손 전 대표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접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들 담론 대부분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복지와 공동체라는 진보적 가치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4대강 등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면 된다"고 하는 수준이다.

당의 한 정책 관계자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세와 농촌 개혁을 꺼냈다가 정권이 흔들리는 부메랑을 맞았다"며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당권 후보들이 당분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눈치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자들 간에 정체성 논란의 구도가 잡혔지만 진정한 노선 대결은 주자들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점에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자칫 노선 경쟁이 구호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구속수사해야" 靑 "청문회서 해명"

정치권 조현오 내정자 발언 파문 확산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제 발언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당사자와 청와대는 중도사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조 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 서울경찰청장직 파면을 넘어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가했다.

최철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조 내정자를 청문회장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검찰이 조 내정자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만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전 의원은 "승진과 출세를 위해 영혼도 팔겠다는 맹목적 충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마치 광주항쟁 진압을 위해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공수부대를 풀었던 패륜적 행태가 연상된다"며 가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 백원우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 재벌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린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조폭들과 조 내정자가 연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자신의 전날 언급과 관련, "조폭 책임자급인 모씨와 조 내정자가 친분이 많다는 경찰 내부의 제보가 있었다"며 폭로전을 계속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사자인 조 청장 내정자는 중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현오 내정자의 발언파문과 관련해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직결된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는 본인이 그 발언을 어느 맥락에서 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 내정자도 '자진사퇴'를 사실상 거부하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조 청장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설은 잘못된 정보"라면서 "청문회에 가서 모든 것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발언과 관련,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들의 모임인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를 청문회 이전에 방문해 해명과 함께 사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과 박병석 위원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全大 '돈선거' 경계령

추석직후 열려 금품 제공 우려
고강도 경고 규정 명문화키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선거' 경계령을 발동할 태세다. 전당대회 특성상 조직 동원의 폐해가 당연시되는 와중에 추석 직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라서 각종 금품·향응 제공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벌써 당내에서는 '어느 캠프가 '실탄'이 많다더라', '누구는 얼마 쓴다더라'는 등의 미확인 '설'까지 나돌면서 캠프별로 상대 진영을 향해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16일 "대의원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거마비'로 지역위원장들에게 봉투를 주는 일들은 여전히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지역위원회 100곳에 선거운동원 1명씩만 심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2억원 이상의 활동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캠프 인사는 "추석 연휴기간 대의원들에게 선물공세를 펴는 문제를 놓고 캠프 간 '눈치작전'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억~20억원, 5억~10억원은 들어간다는 게 정설"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당 전대 준비위는 구태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전대에 엄격히 적용, 금품·향응 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강도 경고규정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직 박탈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대준비위의 김동철 당무발전 분과위원장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대를 위해 혹독한 경고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장선 이낙연 의원 등 10여명으로 이뤄진 '돈 안 드는 선거문화 모임'도 금주중 모임을 갖고 돈선거 감시 및 고발운동 등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당 일각에선 전당원투표제, 일반선거인단 등록제 도입 등 조직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계파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한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정노력이 효력을 발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일세 논의 '백가쟁명'

여권 긍정·부정·신중론 등 다양
야권선 '뜬금없다' 우려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세'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여권 내에서도 긍정·부정·신중론 등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홍준표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일세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며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신중론도 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통일세도 세금이고 이 통일세의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도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우선 선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면서 비핵개방 3000 정책 수정 등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박연차·박영준 증인 채택 진통

이재오 청문회 23일 열기로

여야는 16일 청문회 개최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를 예정대로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협의를 비롯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와 운영위,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를 각각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 특임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로비 의혹과 관련, 남상태 현 사장을 비롯해 신대식 전 감사실장, 오동석 고문, 이상우 상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등 8명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일정을 23일로 결정했고, 지식경제위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을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20일 실시키로 했다.

반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와 기획재정위는 청문 일정 확정에 진통을 겪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오후 3시 열 계획이었던 전체회의를 2차례나 연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